



자유한국당

국회의원 김선동

보도자료

배포일시	2018.10.15(월), 즉시	담당자	서준하 비서관 (010-9085-7121)
문 의	784-8971~3		박필동 보좌관

과징금 감경, 전관예우·전관로비 의혹

-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33건, 931억원 감경 성공
- 공정위 출신 김모 팀장 채용이후, 과징금 감경 성공률 높아져 전관이익0건 → 5건
- 과징금 감경에 전관예우·전관로비 방지책 마련 주문

-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제도에 공정위 퇴직직원의 전관예우나 전관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.
-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(서울 도봉을, 자유한국당)은 공정위(위원장 김상조)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, 공정위 출신이 유명로펌에 취직한 다음해에 유명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 사건의 성공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 - 2014년 7월에 공정위 출신 김모 팀장은 유명로펌인 법무법인 A에 취직하였다. 2012년부터 김모 팀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법무법인 A는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성공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.
 - 김모 팀장이 취직한 그 다음해인 2015년 법무법인 A는 5건, 81억원의 과징금 감경(감경을 55.1%)에 성공하였다. 2016년부터 법무법인 A는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없다. 전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하는 대목이다.
 - 또한 업계에서 김모 팀장을 애니콜 팀장으로 부른다.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무혐의나 과징금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를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다. 전관예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.

- 특히, 김모 팀장이 공정위에서 퇴직할 때와 법무법인 A에 취업할 당시,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봐주기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.
 - 당시 부이사관인 김모 팀장은 2013년 파견기관에서 약 226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 감찰에 적발되어 공정위로 전출되어 대기발령을 받았다. 파견기관에서 ‘비위사실 통보서’가 공정위에 도착하기 전에 아무런 징계 없이 2014년 2월에 퇴직을 하였다.
 - 김모 팀장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.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 기업에 취직할 때는 공정위의 ‘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’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이 필수적이다.
 - 김모 팀장이 법무법인 A에 취업을 위해 공정위가 발급한 ‘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’에 따르면,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, 법 위반 사건을 수임·대리하는 취업예정업체에 취업하더라도 전 소속기관이 공정위에 직·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.
 - 비위 사실로 전출 온 공무원이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하고, 비위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‘취업에 문제없다’는 공정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너무나 허술하고 일방적으로 봐주기, 편들기라는 의혹이 든다.
-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을 보면, 총 33건으로 원심결 과징금은 2,080억원, 재결 과징금은 1,149억원으로 감경된 과징금은 932억원으로 감경률은 44.8%로 나타났다.
- 연도별로는 2012년에 1건, 2013년에 2건, 2014년에 7건, 2015년에 15건, 2016년에 3건, 2017년에 1건, 올해도 4건이나 있었다.
 - 법무법인 등 대리인별로 보면, 법무법인 A가 5건으로 성공건수가 제일 많았고, 감경금액은 81억원으로 감경률은 55.1%를 보였다.
 - 감경금액별로 보면, 허위자료로 과징금을 깎은 성신양회를 제외하면, 법무법인 B가 가장 높다. 법무법인 B가 단독으로 대리한 사건의 경우, 171억원의 과징금을 감경 받았고, 감경률은 56.7%이다.
-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의 경우, 성신양회 사건처럼 공정위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기에 과징금을 감경해주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,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줬다는 의혹이 많다. 즉 유착관계와 전관예우 의혹이다.

-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,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.
-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에 대한 취업심사 4건으로, 이는 취업심사를 받는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만 해당한다.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5급 이하 직원들은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을 할 수 있다.
- 로펌뿐만 아니라 공정위 퇴직직원은 민간기업에도 손쉽게 취직한다. 이처럼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허술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이다.
 - 공정위 퇴직 직원이 퇴직 직전에 핵심 총괄과장직을 맡았는데도 공정위에선 “이 과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”는 취업 확인서를 써주는 수준이다. 형식적인 검토보고서다.
- 김선동 의원은 “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에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.”면서 “형식적인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이 문제다”라고 원인을 지적하였다.
- 또한, 김의원은 “과징금 감경에 전관예우·전관로비 방지책 마련을 해야 한다”고 제도개선을 강조하며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였다.

〈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로펌에 대한 취업심사 현황〉

연번	성명	직급	취업 전 직위 소속	퇴직일	취업 (예정)일	취업 로펌 (직함 등)
1	김○○	4급	OECD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	2013.02.04	2013.3.	김장법률사무소 (위원)
2	김○○	3급	공정거래 위원회	2014.2.4.	2014.7.28.	법무법인 태평양 (공정거래1팀장)
3	전○○	4급	정보화담당관	2015.3.23.	2015.7.1.	법무법인 광장 (전문위원)
4	박○○	4급	창조행정법무담당 관	2017.1.26.	2017.4.1.	법무법인 광장 (전문위원)

* 취업신청 당시의 현황이며, 현재의 재직상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

<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(2012~2018.9.30.)> [단위 : 천원, 개]

연도	건수	원심결 과징금 합계	재결 과징금 합계	감경 금액 합계	감경률	비고
2012년	1	28,442,000	19,909,000	8,533,000	30.0%	
2013년	2	189,000	66,000	123,000	65.1%	
2014년	7	46,737,000	19,022,000	27,715,000	59.3%	
2015년	15	85,001,000	50,993,000	34,008,000	40.0%	
2016년	3	43,911,000	21,980,000	21,931,000	49.9%	
2017년	1	560,000	549,000	11,000	2.0%	
2018년	4	3,226,000	2,359,000	867,000	26.9%	
합계	33	208,066,000	114,878,000	93,188,000	44.8%	

▲ 공정위 제출자료, 김선동의원실 재정리

<대리인별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(2012~2018.9.30.)> [단위 : 천원, 개]

대리인	건수	원심결 과징금 합계	재결 과징금 합계	감경 금액 합계	감경률	비고
법무법인 A	5	14,698,000	6,594,000	8,104,000	55.1%	
법무법인 B	4	30,238,000	13,101,000	17,137,000	56.7%	
법무법인 B+C	1	31,502,000	16,552,000	14,950,000	47.5%	공동 대리
법무법인 D	2	189,000	66,000	123,000	65.1%	
법무법인 E	1	132,000	37,000	95,000	72.0%	
F	1	43,656,000	21,828,000	21,828,000	50.0%	
법무법인 G	1	803,000	200,000	603,000	75.1%	
법무법인 H	1	28,442,000	19,909,000	8,533,000	30.0%	
법무법인 I	1	2748000	1357000	1391000	50.6%	
기타	16	55,658,000	35,234,000	20,424,000	36.7%	대리인이 없거나 개인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
합계	33	208,066,000	114,878,000	93,188,000	44.8%	

<법무법인 A가 대리한 이의신청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 감경 현황>[단위 : 천원]

대표조치일	기업명	원심결 과징금	재결 과징금	경감 과징금	경감률
20151204	□◆건설(주)	6,944,000	2,847,000	4,097,000	59.0%
20150605	(주)▲●건설	1,629,000	844,000	785,000	48.2%
20150513	(주)▲●건설	2,664,000	1,165,000	1,499,000	56.3%
20150506	(주)▲●건설	1,171,000	585,000	586,000	50.0%
20150506	(주)▲●건설	2,290,000	1,153,000	1,137,000	49.7%
합계		14,698,000	6,594,000	8,104,000	55.1%

〈공정위, 김모 팀장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中 발췌〉

4.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의
밀접한 관련성 여부

□ 취업예정자가 퇴직 전 5년간 재직한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
점을 볼 때,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

○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은 위원회 및 소속기관·산하기관에
대한 자체감사 활동, 소속직원에 대한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시책
운용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로 사기업체와는 업무관련성이 없음

○ 취업예정자는 퇴직전 5년중 약 2년 동안 국외파견·휴직 및 대기
발령 상태였음

○ 경쟁정책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 및 주요
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조정을 주로하는 내부 지원부서로서
사기업체 및 법무법인과는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음

5. 취업예정업체에 취업되었을 경우,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

□ 취업예정자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과 취업 후 공정거래 분야의
국내외 제도와 관련하여 소속 변호사 등에게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는
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임

□ 또한 퇴직 전 5년 중 실제 근무기간은 약 3년 5개월이며, 그 기간동안
감사 및 경쟁정책 업무만을 담당함에 따라 범위반 사건을 수임·
대리하는 취업예정업체에 취업하더라도 전 소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
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됨

IV || 종합 검토의견

□ 위 검토와 같이 취업예정자가 퇴직 전 5년간 재직하였던 부서와
취업예정업체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, 취업 후에도 이전 소속
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없으므로,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에 대한 취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